

---

## 주요 Q & A

---

2021. 2.

금융위원회



## 목 차



1.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인지? .....	1
2.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는 것인지? .....	1
3. 공매도 재개시점을 연기한 이유는? .....	2
4.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? .....	3
5.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부터 재개 이유? .....	4
6. 구성종목 변경시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? .....	5
7.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은? .....	6
8. 시장조성자에 대해 공매도 예외 허용? .....	7
9. 개인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언제 시행? .....	7
10. 개인투자자를 위협한 공매도로 내모는 것? .....	8
11. 5.3일 재개 전 별도 금융위 의결 필요? .....	9
12.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어떻게 되는지? .....	9
13.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? .....	10

## 1.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인지?

- ☐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.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
  -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

## 2.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는 것인지?

- ☐ 남은 종목을 언제,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
  -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재개방법·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
- ※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'비금융株'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'금융株'는 별도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연장

### 3. 재개시점을 연기한 이유는?

□ 그간 3.16일에 쏘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,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하였음

- ①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·시범 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과,
- ②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\* 및 형사처벌\*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.6일인 점도 같이 감안 되었음

\* (과징금) 주문금액 범위 내

(형사처벌)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~5배 이하 벌금

#### 4.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?

-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여 연착륙하려는 것임
    - 국정감사 등에서 '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'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
    - 그간 공매도 재개시 전면재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음
  - **소 금융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의 경우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과 같이,**
    - 공매도도 일시에 **소종목을 재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수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함**
- \*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'비금융株'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고, '금융株'는 나중에 재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한 경험

##### ※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

- (개요) 공매도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**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**(Designated Securities eligible for short selling) 도입('05.1.27.)
  - 최초 **33종목**에 대해서만 **공매도를 허용**('94.3월) → 규모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**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식** 도입('05.1월)
    - 시장규모의 성장 등에 따라 **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, 대상종목을 확대**
- (대상종목) 거래소가 수시로 **공매도 가능종목을 업데이트**(종래 분기별 대상종목 선정방식에서 변경)

##### 공매도 가능종목 선정기준(주요기준 일부)

- 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상품의 기초지수(underlying indices)의 모든 구성종목
- ② HKFE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상품의 기초지수의 모든 구성종목
- ③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옵션의 모든 기초자산
- ④ HKFE에서 거래되는 주식선물 계약의 모든 기초자산
- ⑤ 시가총액이 HK\$30억(≈4,200억원)을 초과하면서, 직전 12개월간 시가총액 회전율(총 거래대금/평균시총)이 60%를 초과하는 종목

**5. 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?  
시총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?**

☐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우선 해제 종목그룹으로 선정한 것은

- 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고,
- ② 시가총액이 크고,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,

※ (코스피200) 전체 종목 수(917개)의 22%, 전체 시총(2,060조원)의 88%  
(코스닥150) 전체 종목 수(1,470개)의 10%, 전체 시총(392조원)의 50%

- ③ 파생상품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임

☐ 참고로 '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'의 경우도 단순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허용종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,

- 지수종목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종목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고,
- 시총이 일정규모 이상인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

**6.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변경시 공매도 가능  
종목도 변경되는지? 허용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 
알 수 있는지?**

☐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  
종목도 변경됨

\* 신규 추가된 종목 → 공매도 가능 // 제외된 종목 → 공매도 금지

☐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며,

- 코스피200·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시 2주간 공시되는 것을  
통해서도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

**※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선정방법**

☐ (선정방법) 한국거래소에서 11개 산업군별\*로 <sup>(1)</sup>누적시가총액  
및 <sup>(2)</sup>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함

\* 정보기술, 헬스케어, 커뮤니케이션서비스, 소재, 산업재, 필수소비재, 자유소비재, 금융,  
부동산, 에너지, 유틸리티

(1) 산업군별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누적 시가총액이 해당 산업군 전체  
시가총액의 85%(코스닥 60%) 이내

(2)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85%(코스닥 80%) 이내

○ 산업군별로 추출된 종목을 합산한 결과,

- 지수별 종목 수 한도(코스피 200종목, 코스닥 150종목)를 초과하면,  
시총 하위종목부터 제외하고,

\* (예) 코스피시장에서 11개 산업군별로 각각 20개 종목이 선정(총 220종목)되었  
다면, 해당 종목중 시총 201위~220위까지 종목을 제외

- 반대로 종목 수 한도 미달시 종전 구성종목이었다가 선정되지  
않은 종목 중, 거래대금 기준을 충족하고 시총이 높은 順으로 추가함

☐ (구성종목 변경시기) 반기(6월·12월) 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

- 4월·10월말 시총 등을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하고, 2주간  
공시 이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 운영

## 7.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은?

-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개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
  -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.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,
    - \* (과징금) 주문금액 범위 내
    - (형사처벌)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~5배 이하 벌금
  -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
  - 또한,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(6개월→1개월),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·감시를 강화할 계획
  - 그간 증권사,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,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,
    -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,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    -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,
      -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  -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.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
    - i)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,
    - ii)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임
-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·보완해 나가겠음



## 8.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허용하는지?

- ☐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지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허용됨
  - 그러나, 3.16일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
  - 아울러, 4.6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,
    -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

## 9. 개인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?

- ☐ 개인도 마찬가지로 5.3일부터,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함
  -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,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에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

10. 위험투자인 공매도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?

-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“기회를 제공”하는데 방점을 두어 제도개선 중
    -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
  - 다만,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,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,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함
    - 개인분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·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·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
    - 아울러,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
- \* (예) 초기투자시 **3,000만원** →  
2년내 5회이상 & 5,000만원이상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**7,000만원** →  
투자경험 요건 & 최초 투자 이후 2년경과시 **제한없음**  
(cf. 전문투자자의 경우 한도 미적용)

## 11. 5.3일 재개 전 별도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지?

- ☐ 이번 금융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.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였고,
  - 5.3일부터는 별도 의결 없이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됨
- ☐ 다만, 그 이외의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함

## 12.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어떻게 되는지?

- ☐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마찬가지로 5.2일까지 연장되고, 5.3일부터는 종료됨

※ 4.30일까지 매수주문을 제출한 경우 특례조치 적용

### 13.

###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?

-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\*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음
  -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
    - \* (나라별 시총 순위) 미국 → 중국 → 일본 → EU → 인도 → 영국 → 캐나다 → 사우디 → 독일 → 한국 順
  -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, 공매도 제한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
    - ※ 공매도 허용여부는 MSCI, FTSE 등 글로벌 지수(추종자금의 국내투자 280조원 이상 추정) 산출기관에서 국가별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활용중
-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%, 기관은 약 50%를 차지하는 투자주체임 (보유규모 기준)
  -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,
    - 만약,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
-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므로
  -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·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임
- 최근 IMF('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시)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'투박한 도구(blunt instrument)'이며,
  - 개인투자자 관련 문제는 소비자 보호, 금융감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언급한 바 있음